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22.9.26)
- ②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최초로 전수('22.10.17)
- ③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 위해 시·도 및 교육청과 소통의 장 마련('22.9.28)
- ④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비리 막는다('22.10.5)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9)

##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와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 등 공유

23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 소개

(22. 9. 26. 국민권익위)

국제사회에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소개하고 반부패 제도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 오후 4시 제2회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반부패 온라인 토론회에 참여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 발전 내용을 발표했다.

‘타슈켄트 반부패 포럼’은 부패척결 및 예방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다.

이번 토론회에는 세계은행·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 미국 마약단속국·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등 각국의 정부 부처 및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등 전세계 반부패 전문가가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는 1)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의 개방성과 투명성 확보, 2) 효과적인 부패 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3) 반부패 교육 및 의식 개선 총 3가지로 각 주제별로 참여자들의 발표와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의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첫 번째 발표 주제인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으로서 개방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해 한국의 반부패 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2002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이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그리고 최근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및 2022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반부패 제도 발전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국민신문고, 청렴포털\* 등 한국의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반부패 투명성 제고 정책을 공유했다.

\* 청렴포털(Clean Portal):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국민권익위 임윤주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부속서인 부패측정 모범사례집에서 한국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통합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슈켄트 포럼 회의장 모습>



<회의 포스터>



<인사말씀>

<세션 I 사회자>  
한스 울리히 아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우즈베키스탄  
지부장 대행



< 세션 I 발표자 ① >  
자콘길 시리노프  
우즈베키스탄 의회 입법위원장

< 세션 I 발표자 ② >  
국민권익위 원영재 국제교류담당관



< 세션 I 발표자 ③ >  
제미슨 헤닝거  
Open Data Watch 프로젝트 매니저



< 세션 I 발표자 ④ >  
나짐 라자보브  
아제르바이잔 검찰청 반부패과장



< 세션 I 발표자 ⑤ >  
고란 클레메키치  
슬로베니아 지역기반 NGO 'Regional Dialogue(지역담화)' 법률전문가



< 세션 I 발표자 ⑥ >  
미로드 쿠사노브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경제·환경사무소  
프로젝트 책임자



##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등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중남미 국가에 최초로 전수

한국 반부패 정책에 관심 높은 코스타리카·파라과이 정부 요청으로  
반부패 교육과정 개설

(22. 10. 17.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전수하기 위한 대면 연수과정이 개설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코스타리카 감찰원과 파라과이 감사원 소속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반부패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연수는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 정부가 우리 외교부를 통해 반부패 우수사례 공유 및 자국 공무원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마련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파라과이와의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번 연수를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첫 연수로, 한국어-스페인어를 순차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수단의 수석대표로는 호세 로베스 발토다노 코스타리카 감찰원 공직윤리국장(Public Ethics Office, Procurator General Director)과 아우구스토 파이버 파라과이 감사원 부원장(Deputy Comptroller General)이 참여한다.

국민권익위는 양국 정부의 공통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해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신고자 보호제도, 청렴포털 시스템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이번 연수는 그 중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청렴도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취약요인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청렴도평가는 2012년에 유엔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은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등 5개국에 전수돼 각국 공공부문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부패 예방정책으로 정착되고 있다.



**'청렴도 측정' 2012년 유엔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대상 수상**

**태국 '청렴투명성평가'(ITA) 관련 기사('20.6.22. 방콕포스트)**  
\* 한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14년 ITA를 개발하였다고 소개

**인도네시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조사'(SPI) 홍보 영상**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한국의 반부패 제도가 코스타리카와 파라과이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반부패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기술지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외에도 중남미를 비롯해 아프리카, 중동 지역

까지 반부패 기술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 위해 시·도 및 교육청과 소통의 장 마련

*광역지자체 공익제보지원위원회와 함께 신고자 보호 제도 발전과  
협력 방안 논의*

(22. 9. 28.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자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및 교육청의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직접 만나 소통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전국 광역자치단체·교육청에 설치된 13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원위원회가 제시하는 의견을 수렴한다.

\* (광역)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남, 충북  
(교육청) 경남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협의회 개요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제주, 충남, 충북,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전라, 경북</li> <li>▪ 교육: 경남, 부산,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전남, 제주</li> </ul>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 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매년 2회 (상·하반기) 정기 회의·간담회 등 개최</li> <li>▪ 수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논의 사항 발생시 참석시기, 참석 범위를 변경하여 회의 개최</li> </ul>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또는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23개 시·도·교육청에 설치돼 있다.

지원위원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포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도 심의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고자 보호·보상 정책에 대한 논의로 ▲올해 1월 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개선\* 내용 ▲신고자 보호·보상 법령 일원화 정책 추진상황\*\* ▲신고자 보호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 및 판단기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지원위원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그 해결 방안도 공유할 예정이다.

\*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공공기관의 신고자 책임감면 확대, 위원회의 책임감면 요구권, 위원회의 법원에 대한 책임감면 의견제출권, 구조금 지급 확대

\*\*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통일(지급비율 30%, 보상금 상한 폐지)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보호·보상 일원화 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자가 보호되고, 지역 특성과 현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와 지원위원회 간의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 비리 막는다

공동주택 관리직원 횡령,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등 근절방안  
마련해 제도개선 권고

(22. 10. 5. 국민권익위)

최근 문제로 지적됐던 '난방비 0원 세대' 문제, 공사 입찰가격 부풀리기, 공동주택 관리직원의 횡령 등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에 권고했다.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 관리직원이 지출 증빙서류 등을 위·변조해 차액을 횡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주택감사가 예금잔고증명과 관계 장부를 대조하도록 했다. 또한, 전기·소방·도색공사 등의 담당자가 지출 적정성을 검토해 지출담당자의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횡령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부적정하거나 과다하게 난방비 등 관리비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 내역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도록 했다.

난방비는 보통 각 세대에 설치된 계량기의 측정치에 따라 부과되고, 세대별 측정량 외의 공동 사용량은 전체 관리비에 포함된다. 이 때 각 세대가 고의적으로 계량기를 파손시켜 난방비를 0원 처리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경우 나머지 세대는 0원 처리된 세대의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가 관리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 단지·평형 아파트 관리비의 최고, 최저 및 평균치를 입주자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공동주택 내 공사 계약시 공사 예정가격이나 입찰최고가격을 공고해 입찰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관리비 과다부과를 막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 연체시 일부 지자체가 연 15%, 1년 도과시 연 20% 등 지나친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어 12% 수준으로 낮추도록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비리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